

여야, 역사교과서 국정환원 뜨거운 공방전

새누리 “통일성 위해 국정 체제 전환을”

민주 “유신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여야는 9일에도 최근 논란이 제기된 역사교과서 국정 체제 환원 논란과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국가적 통일성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국민 혼란과 여론 갈등이 심하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봉합하려면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인 교회사 교과서를 학생과 학부모가 집단 거부한 것은 집단 지성의 결과”라

서 “역사와 교육을 이념 논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력을 다해 지키려 했던 교회사 출판물, 채택률이 0%대가 되자 ‘국정교과서’ 얘기를 꺼내고 있다”며 “채택 과정 따위가 필요 없도록 대응과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민주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공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매년 반복돼선 안 되고 개선방안을 찾

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정교과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국정교과서도 유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의원은 “1974년 유신교육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했다가 세계적인 흐름과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2002년 검인정체제로 전환됐다”며 “지금 국정교과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고 ‘다시 유신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거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념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이 기존에 검인정을 다 통과했던 교과서를 다 종북으로 몰면서 역사교과서 이념 갈등이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가 교회사 교과서 철학을 위해 외압 여부를 조사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고 새누리당 실세들이 교회사 교과서 채택률이 낮다고 개탄하자 교육부가 ‘교회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 자체가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추’ 난장토론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광주를 묻고 찾는 사람들’이 9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새정치 시민에게 길을 묻다’란 주제로 난장 토론회를 열었다. 윤장현 새정추 공동운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윤장현 새정추 공동위원장 기자간담회

“지방선거, 신당으로 치를지

‘준비위’로 치를지 논의 중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 성격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9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신당을 창당해 치를지, 창당준비위원회로 치를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의 열망을 알고 있다”며 “새정치추진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추진위 결성 전까지는 지방선거 전에 창당하겠다는 생각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감

안해 정치 일정대로 창당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 창당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새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만큼 창당 시기를 못 박아두지 않은 것”이라며 “무리하지 않게 정치 일정에 맞춰 창당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당준비위원회 선거를 치를 경우 ‘공천’을 못하고, 전국 선거구 단위에서 일률적인 기호를 배정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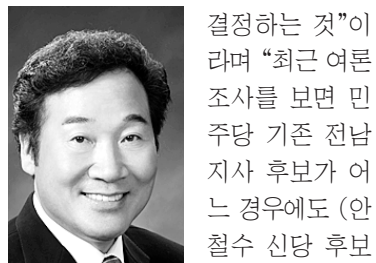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윤 위원장은 “광주 공동체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이낙연 “중진차출론은 安신당 도와줄 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일 “중진차출론은 옳지도 않고, 당에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며 “당 지도부가 근거 없는 차출론 확산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기존후보로는 승리하지 못할 것처럼 전제해 차출론을 말하는 것은 당 후보군의 경쟁력을 해치고 당원들을 불안하게 하며 당에 손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차출론은 전략공천을 뜻하는데, 전략공천은 기존후보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당 의결기구가 신중히 의논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당 기존 전남지사 후보가 어느 경우에도 (안철수 신당 후보를) 큰 차이로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실공천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방식이 아니라 정치후퇴의 전형인데, 전략공천을 계속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철수 세력’의 이른바 ‘새 정치’의 명분을 도와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 견해차 확인

교육감 선거 “임명제” “직선제” 팽팽

정개혁위 교육자치소위 회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의원인 시·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착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의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했다. 현행 시·도의원 선거구는 선거구 간 최대·최소 인구 편차 기준을 4대1로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 등으로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현행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 편차 4대1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늘리자는 의견과 의원을 늘리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선거구 내에서 조정하지는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이날 시·도의원 선거구 문제 논의에 앞서 공개회의에서 시·도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로또 교육감’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정신과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현행 직선제 유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직선제 교육감이 인사권을 장악해 제약적 지위를 이용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일반 국민의 지적이 따깝다”며 “이런 것을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으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직선제는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 주민들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간선제나 임명제보다 더 확실한 책임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하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 출석한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교육감 선거에서의 러닝메이트 도입은 위헌성 여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책협력 등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안하면

박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아닌가”

민주·시장군수협, 여 압박

민주당은 9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 움직임에 대해 또 하나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규정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정장)도 이날 새누리당에 지방선거 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 “정당공천 폐지를 우선 논의하고 합의할 것을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이 문제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도 모두 약속한 것인데 이제 대통령은 모르쇠로, 새누리당은 오리발을

내미는 것으로 공수를 부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초의회 폐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새누리당을 향해 “올림픽을 위해 선수들이 4년 동안 출전을 준비했는데 대회 한 달을 앞두고 종목을 없애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면서 “정치개혁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새누리당은 오히려 논점을 희석시키고 자치구의회 폐지와 자치단체장 임기 2년임 축소를 대안으로 제기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 · 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 · 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 010-3690-779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